

특집
논문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

오은정 _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간 시민연대의 형성과 그 사회문화적 토대, 그리고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1950~1960년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을 짚어본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운동에 참여한 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인물들의 체험과 반성의 사유라는 미시적 차원과, 일본의 피폭자 운동과 유일피폭국 담론의 양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차하여 살피기 위함이다. 둘째, 1970~1980년대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한반도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 한계를 지운 안보와 반공담론 등의 정치사회적 제약과 이로 인해 생겨난 운동의 방식과 대외 교류 활동의 양상을 살펴본다. 마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3)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학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DOI: <http://dx.doi.org/10.31008/MV.39.3>

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주요 성과가 된 소송 중심의 수첩 재판의 성격과 그것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연대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 **주요어:**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한·일 시민연대, 반공 담론, 수첩 재판, 피폭자

1. 들어가며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부산지부장 엄분연 등 회원 10명은 1일 오전 11시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러온 일본 사토 수상을 만나 피해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 생활대책, 자녀들의 교육대책 등을 세워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키위해 주한일본대사관으로 몰려갔다가 종로서로 연행됐다(동아일보 1971/07/02).

여기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기사가 있다.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하 원폭협회로 약칭) 부산지부에 소속된 여성 회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추어 국교 수교 이후 최초로 국민으로 방문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수상에게 일본어로 된 요망서를 전하러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이 전하려는 서신에는 “전후(戰後)는 끝났다며,¹⁾ 이제부터 세계평화질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1) 1971년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반환협정을 체결한 후 사토 총리가 한 말로 그때까

자 하는 귀국 일본이 전쟁 전에는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부르며 사역하고 희생한 한국 피폭자들에 대해 짐스러워하게 된 지금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일본국의 법밖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등”의 태도를 버리고 인도적인 자세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뤄달라고 쓰여 있었다.²⁾

신문 지면에 짧게 소개된 이 일은 누노가와 테츠로(布川徹郎) 감독의 다큐멘터리 <왜놈에게(倭奴へ: 在韓被爆者無告の二十六年)>(1971/09/25)에서 보다 생생하게 그려진다.³⁾ 부산의 한 언덕배기 위의 좁다란 골목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허름한 관갓집들, 햇빛은 달동네 아이들의 모습에 그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목소리의 일본 여성의 내레이션으로 소개되고 영상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영상 속에서 카메라는 사토 총리에게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원호를

지 일본을 규정해온 전후 질서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 2) 이 일본어 요망서는 <倭奴へ> 영상에서 엄분연 씨의 음성을 통해 낭독됐다. 요망서의 전문은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2011)에 연구자가 번역해 실어 놓았다. 이 편지는 그 자체로 1970년대 당시 부산의 중년 여성 원폭피해자들에 의해 쓰인 문어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을 가능케 한 그녀들의 교육적 배경 등을 추측케 한다. 엄분연, 박차점, 김일선, 이일수 씨는 모두 1930년대 초반과 그 이전에 태어나 일본에서 소학교고교등과 교육을 받았다.
- 3) 누노가와 테츠로 감독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를 질주했던 일본 다큐제작자 연합(Nihhon Documentarist Union, NDU)의 주요 멤버로서 반전 다큐 등을 제작했다.

바라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한 무리의 여성들을 따라 다닌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차에 호송되어 종로서로 향하는 모습, 작은 사무실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전면에 걸어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 원폭협회 서울 사무실의 모습도 비친다. 1968년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귀환 조치된 손귀달과 그녀가 밀항 당시 땀을 범한 작은 통통 배며, 초창기 원폭협회 부산과 경남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이 중간 중간 인터뷰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히로시마 소학교 시절에 배운 일본어 노래를 애잔하게 부르는 장면들도 비친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부산으로 돌아온 이들에게서 서울의 협회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일본의 반전평화단체와 사회당 소속의 피폭자단체 회원들이 한국의 여성 피폭자들과 연대하여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요청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가 영상 속의 세 여성과 이들의 지인을 만난 건 2008년과 2011년이었다. 2008년에는 원폭협회에서 회원카드를 정리하던 중 영상 속의 인물들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분을 일부러 찾아간 경우였고, 2011년에는 생애사 인터뷰를 위해 들른 합천의 원폭피해자복지관과 원폭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피폭 체험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추천된 분들을 만났는데 우연찮게—하지만 증언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생애사 인터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떤 점에서 필연적으로—그렇게 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이들은 영

상에서는 시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잡혀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시위는 당연히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잡혀가야 뉴스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주었다.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에서 한·일 시민연대는 운동의 중요한 축이자 동력이었다. 위 시위와 작품은 그와 같은 한·일 시민연대 활동이 시작된 초창기의 한 장면이다. 일본에서 ‘재한피폭자(在韓被爆者)’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던 때, 원폭협회 부산지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에 가담하여 만들어낸 일이었다. 시위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나카지마 다츠미(中島 竜美)는 1960년대부터 한국 원폭피해자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인물이다. 당시 시위의 조직과 영상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말이 통하지 않아 아무래도 협력이 쉽지 않게 된”⁴⁾ 2000년대 후반과는 달리, 오히려 이 시기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단체간의 연대활동이 더 활발했다. 시위를 이끈 엄분연 지부장과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가 살았던 이들로, 이들은 일본 감독과 의사소통 하는 일도, 일본어로 총리에게 요망서

4) 연구자의 2011년 한국원폭협회 필드워크 과정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말이 안 돼서’라는 문구였다. 1990년대에 원폭협회의 주요 간부나 활동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일본어와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1930년대 말과 1940년대생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 시기에 협회와 일본 시민단체 간 활동 협력이나 연대에는 ‘번역자’를 필요로 했다.

를 쓰는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해냈다. 편지에 썼던 것처럼 그들은 식민지 시기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불리며 제국일본의 전쟁 체제에 사역하고 희생한 황국의 신민들”로 자랐던 이들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 속에서 한·일 연대의 모습은 종군 위안부나 전시 노무자, 한센병 환자와 일본군의 군인 및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이들의 경우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일제피해자 문제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화된 것과 비교해, 원폭피해자 문제는 195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일본 사회와의 연대도 가시화됐다. 연대의 지속성과 연결 지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강도는 다른 한국의 일제피해자 운동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역사에서 이와 같은 한·일 간 연대가 갖는 독특한 위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생존자들이 일본의 전후(戰後) 질서에서 갖는 특수한 정치적·법적 위상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로서 ‘국가 보상적 배려’에 의해 원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원폭피폭자(原爆被爆者)’고,⁵⁾ 이들이 일본의 반핵 평화운동에서 갖는 상징적 자원들을 생각했을 때 일본 사회의 관심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시민 사회 내에서도 ‘재한피폭자’ 문제가 언제나 ‘당연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平岡敬 1988).

5) 전후 일본에서 원폭피폭자의 정치적·법적 위상의 특수성은 오은정(2018b) 참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여해왔다는 사실 자체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서나 증언집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원폭피해자 관련 서적은 드라마 작가 박수복(1975; 1986)의 르포르타주, 한국 원폭피해자 조직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89)와 그 회원이던 김재근(1968)이 조사한 현황 보고서 그리고 그 시기 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인 유일한 한국의 시민단체였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75; 1984; 1989)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나가사키증언회(長崎の證言の会)’는 1969년 『證言』을 창간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피폭자들 또한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재외 피폭자,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 동원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1970년대 중반 일본 아사히신문사에서 발간한 『被爆韓國人』(朴秀馥·郭貴勳·辛泳洙 1975)은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 원폭피해자에 관한 단행본 증언집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 외에 ‘히로시마·나가사키증언회(広島·長崎の證言の会)’와 ‘재한피폭자의료조사단(在韓被爆者医療調査団)’이 공동으로 발간한 『일본사람에게: 40년째의 한국 피폭자(イルボンサラムへ: 40年目の韓国被爆者)』(1986), 일본의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회>로 약칭)’나 ‘재한피폭자도일치료 히로시마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태

와 증언 등이 실려왔다. 이는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 속 한·일 연대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최근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를 평화운동의 측면을 조명한 연구와 일본 내에서의 재한피폭자 문제의 사회화와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양동숙 2018; 이지영 2017; 김원 2017; 조항미 2011; Oh 2017; Palmer 2013)는 기존의 한국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한·일 시민연대가 갖는 의의를 잘 보여준다.⁶⁾ 본 논문은 이

6) 1990년대 이후 원폭피해자 연구는 크게 식민 지배와 전쟁 피해로 인한 대일보상의 법적 절차와 의미를 묻는 연구(백충현 1987; 이상화 1995; 최이수 2003; 안자코 2001; 다카기 1995; 우즈미 2010)와 의료와 복지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1991; 김정경 1993; 백옥숙 2004; 손종민 2006) 나뉜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 2심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박귀훈 씨가 일본에서 제조한 이른바 제2의 수첩 재판 승소 판결 이후, 일본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 해온 '시민회' 회장인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3)가 번역되어 나왔고, 시민회의 지원을 받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 연구가 나왔다(진주 2004; 정근식 2005). 2000년대 중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일제피해자'로서 원폭피해자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과거사 청산으로서 한국 원폭피해자 소송의 의의 등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지영 2012; 김승은 2012a; 2012b;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08; 2011; 허광무 2004; 2011). 이외에 한국 원폭피해자만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억의 정치'(Yoneyama 1999)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유일피폭국 언설과 평화 담론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 대한 시공간적 재현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한국 원폭

연구들의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오가는 이 같은 한·일 시민연대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사회문화적 토대를 역사인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이는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를 한국과 일본을 국가 단위로 설정해 피해와 가해의 구도로 설명하거나, 외교적·정치적·법적 차원의 보상 책임과 요구에 대한 응대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면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설명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부분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 속에 한·일 연대의 여러 결들을 사회문화적으로 맥락화해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히로시마 주요 활동가들의 생애사적인 이력과 히로시마 거주 재일한국인 네트워크를 조명하고, 원폭협회와 원폭협회 회원들의 개별적인 피폭자 건강수첩 취득 등이 가졌던 효과를 살핀다. 나아가 이들과의 관계와 연대 속에서 전개된 일련의 활동이 일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된 사정과 그 성격을 고찰한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운동에 참여한 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인물들의 경험이라는 미시적 차원과, 일본의 피폭자 운동과 유일피폭국 담론의 양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차하

피해자들의 위치를 조명한 연구들도 있다(Naono 2003; 2005; 2010; 권혁태 2009; 박경섭 2009).

여 깊어본다. 3장에서는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한반도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을 한계 지운 정치사회적 제약과 이로 인해 생겨난 운동의 방식과 대외 교류 활동의 양상을 살핀다. 4장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주요 성과가 된 소송 중심의 수첩 재판의 성격과 그것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연대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논문의 자료는 문헌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과 한국, 원폭협회에서 수행된 연구자의 현장연구 인터뷰에 기초한다.

2. 한국 원폭피해자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

한국 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에서 한·일 시민연대는 원폭협회의 활동과 개별 회원들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동력이었고 의지처(意志處)였다. 연대의 기원은 원폭협회가 설립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연결 지점은 단체 간 공식적인 채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⁷⁾ 전 히로시마시장은 이 연대 형성의 초창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사다. 그의 인

7) 히라오카 전 시장은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지금의 북한 선봉, 흥남, 서울 등지에서 소학교 일부와 중학 시절을 보냈다. 조선에 가기 전에는 후일 히로시마의 폭심지가 된 혼가와소학교(本川小學校)에 1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었으며, 패전 후 귀국해서 이곳의 동급생들이 원폭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연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귀환자(引揚者, 히키아게샤)⁸⁾라는 생애사를 반영한다. 1927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후 1934년 아버지가 있는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한 뒤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활 그리고 히로시마의 지역 주재 기자로서 반핵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회당 계열의 진보 성향을 가진 그의 이력은 자연스럽게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로 연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64년 한국으로부터 도착한 편지였다. 마산의 국립병원에 폐결핵으로 입원한 박수암이라는 사람이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와 구호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계기로 그는 곧바로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만날 것을 계획하게 된다. 한일회담이 중심이 되는 짧은 취재기간이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아홉 명의 한국 원폭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때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정말 늦은 것이었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역시 피폭 한국인, 피폭 조선인의 문제를 잊고 있었거나 혹은 무시하고 원폭피해의 문제를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도 유일피폭국이라고 하는 또는 피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평화를 호소해온 것을 겨우 알아차린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전후 20년이 다 되

8)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군인과 군속의 귀환은 복원(復員), 식민지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귀환한 이들을 인양자(引揚者) 즉 일본어로 ‘히키아게샤’로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어 발음대로 ‘히키아게샤’로 통칭한다.

어 가는 때였다”라고 회고했다(平岡敬 1988, 10-12).

일본에 돌아온 히라오카 씨는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와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인연은 이후 손진두 씨 수첩 재판 지원으로 이어진다.⁹⁾ 1970년 12월 손진두 씨가 일본으로 밀입국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를 면회하는가 하면, 손진두 씨가 피폭 당시 살았다는 히로시마 시 미나미간온마치(南觀音町)로 달려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히로시마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제송환반대 투쟁을 부탁하고, 히로시마의 젊은 의사들에게 손진두 씨의 건강 진단을 의뢰한다. 이때 ‘손진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이 결성된다. 1972년 손진두 씨의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취소 청구 소송이 시작됐을 때 그는 소송과 관련된 후생성·법무성과의 교섭을 나카지마 다츠미(中島龍美)¹⁰⁾ 씨에게 부탁하고, 그 자신은 재판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물색하고 비용을 모금했다. 사회당 계열의 반핵평화운동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쥬고쿠신문(中国新聞)』 사장을 거친 그는 1990년대에 8년간 히로시마 시장으로 재직했다. 조선인원폭피폭자위령비의 히로시마평화공원 내 이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¹¹⁾

9) 손귀달과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치바 준코(2003), 그리고 사건 일지와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태도에 대해서는 김승은(2012a) 참조.

10) 나카지마 다츠미는 프리랜서 언론인 출신으로 이후 〈시민회〉와 〈재한피폭자문제 시민회〉의 대표로 활동했다. 히라오카 씨와는 친구이자 동료.

1970년대 초부터 한국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히로시마 가와무라(河村) 병원의 초대원장인 가와무라 도라타로(河村虎太郎)¹²⁾ 씨도 식민지 조선에서의 귀환자였다. 1971년 방한하여 원폭협회를 방문한 ‘오리쓰루회(折り鶴の会)’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히로시마에서 ‘한국원폭피해자구원한일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속죄의 의료단(贖罪の医療団)’ 활동을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일본 ‘핵무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핵금회’로 약칭) 히로시마지부와 함께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 최초로 설립된 원폭피해자 전문 진료소였다. 1974년에는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와 함께 ‘재히로시마한국인·조선인피폭자구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모임은 ‘재한국원폭피폭자를 히로시마로 초청하는 운동’과 ‘재한피폭자도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이하 ‘도일치료위원회’로 약칭)로 발전했으며, ‘도일치료위원회’는 2000년대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손진두 씨의 소송을 계기로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약칭 ‘시민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민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나카지마 다츠미씨는 한일협정 체결 직전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불법체류 및 강제송환 사건을 계기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11) 조선인원폭피폭자위령비의 평화공원 내 이전에 대한 연구는 박경섭(2009), Yoneyama(1999) 참고.

12) 경성제대 의과대학 졸업 후 히로시마에서 내과 병원을 개원했다.

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1968년에 밀항한 손귀 달 씨의 문제에 관여하고, 이후 히라오카 씨와 함께 손진두 소송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中島龍美 1988, 43-44).

1959년 당시 '동경도원폭피해자단체연합회'(별칭 東友會) 사무국 일을 맡고 있던 이토 다케시(伊東壯)의 진술에서는 앞의 두 사례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한국 원폭피해자를 만난 것은 1959년의 일이다. 원폭피해자 수첩을 받기를 원하는 한국 원폭피해자가 집까지 찾아온 일이 계기였다(伊東壯 1988, 27-28). 그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일본 피폭자들과 마찬가지로 반핵의 살아 있는 증인임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의 반민주주의를 고발할 수 있는 증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책임을 묻고 연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이 같은 연결과 대응은 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보다 일본 사회에서 더 깊은 호소력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 그 가운데 우선 나카지마 다츠미가 언급한 일본의 사회운동사적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베트남전을 두고 벌어진 반전평화 운동, 그리고 아시아인을 배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하는 입국관리행정에 반대하는 운동,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움직임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 운동이 고양되던 때였다. 반핵 운동에 있어서는 비키니섬 피재(被災)를 계기로 점차 고양되던 반핵 움직임이 차차

정당 계열화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미일안보조약을 기해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사회당 계열과 공산당 계열이 차차 분열되기 시작하고, 1964년 소련의 핵실험 반대 여부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켰다(広島県被爆者団体協議會 2001, 77-86).

냉전체제 하의 반핵평화라는 주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이 시기는 히로시마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원폭 돔 보존이나 원폭피재백서 만들기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폭 관련 기록 보존 및 복원 활동이 한창이던 때이기도 했다(根本雅也 2006). 이토 다케시의 회고에서도 잠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원폭의료법(1957년 제정) 실시 이후 그 실효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보상법을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원폭피해자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를 높이고 있었던 때였다. “6·25동란과 재건 건국 도상의 가난한 생계 속에서 전재민, 전상자가 ‘우리뿐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시절”(원폭협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중), 그리고 이후에는 ‘다 같은 식민의 피해자’ 혹은 ‘일제의 피해자’라는 범주 속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고, 더군다나 강제 동원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되어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한 이 시기에 비하면 일본 시민 사회의 원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은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거기에 연대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은 당시 일본에서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피폭자’라는 담론 속에 가려져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 피식민지들과 마주하는 데서 온 충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히라오카 씨나 가와무라 씨의 활동 계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놀라움을 넘어, 조선의 식민지였던 과거를 직시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피폭을 매개로 한 이들 과거의 피식민지들과 식민지들 사이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성’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은 전후 세대로서 오늘날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운동가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의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유일피폭국’이라는 언설이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수행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애매한 입장과 회피로 일관할 수 있게 한 주류적 내셔널리즘의 보편적 수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모순과 균열에 대한 자각 또한 그 언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매우 양가적이고 또 역설적이다.

한편,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운동의 연대가 사회운동사적 측면에서도 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바가 있지만, 한국 원폭피해자의 역사 역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의 조선인 이주와 귀환, (귀환 이후 일본으로의) 재입국 등을 통해 형성된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와 귀환 동포(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 간의 친인척 간 연결망이라

는 차원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오은정 2013; 2014; 2018a). 한·일 시민연대에서 히로시마 이주 커뮤니티와 귀환을 주목하는 것은 강제동원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이 대체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이주 커뮤니티와 귀환자들의 네트워크가 한국 원폭협회와 원폭피해자들의 개별적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

1950년대 언론보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동아일보 1958/03/27). 그리고 1949년 이후 여러 차례 토론과 중단을 거듭했던 한일회담이 전후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1957년 제4차 한일회담 예비회담과 이듬해 제4차 한일회담 등이 진행될 당시에는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거류자 상호 석방, 문화재 반환 등이 주요한 주제가 된 만큼 원폭피해자 문제를 자각한 이들도 존재했다. 1958년 8월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다룬 기사와 함께 한일회담에서 이들의 보상 문제를 다뤄줄 것을 한국 외무부에 호소하는 곽귀훈의 글이 게재됐다(이치바 2003). 1963년 봄에는 이종욱·오남련 부부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과 일본 대표부, 그리고 신문사 등에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박수복 1975, 「오남련」 편).

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원폭피해자 조직이 일찍부터 결성되었다는 증언도 있다.¹³⁾ 1959년 즈음의 일로 히로시마에서 귀

13) “보내주신 기록에 59년에 합천 피해자 모임 이야기를 써 놓으셨는데, 시기가 확실

환한 합천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한일회담에서 원폭피해자 보상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논의하거나 외부 선전활동이 주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모임에 대한 문서상의 기록을 원폭협회나 다른 책 혹은 개인적인 수기 등 다른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임의 명칭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의 실태를 호소하는 편지가 1960년경부터 자주 민단에 도착”하던 때이기도 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으로 약칭) 히로시마지부는 1963년 3월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

한가요?”(연구자) “맞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는데, 한 달에 몇 십 원씩 내고 모였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권유해서 제일 어린 나이에 가입한 셈이지요. 59년은 확실한 연도인데, 제가 그때 57년에 경찰서 통신관련 일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가입했거든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처음엔 몇 십 명 정도였고 나중에 백여 명 됐나. 주로 선전활동을 했어요”(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07/1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김종철」 편). 경남지부에서 협회 지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철 씨의 위 이야기는 합천에 살고 있는 다른 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천모임이 협회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연구자) “그게, 육이오 후고 내가 스무 살 넘어서 서른 정도 되었을 때니까, 맞아요. 협회 있기 전에. 거기는 협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홍규라는 사람이 집에서 일을 보면서 한 거지. 노홍규, 최성춘, 정기장 그런 사람들이예요. 정기장 씨는 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글을 잘 했어요. 근데 그런 사무실도 없고, 최성춘 씨가 식당을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그랬지. 노홍규 씨가 초대 지부장을 했어요. 합천에는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연구자와의 인터뷰 2011/07/1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이재석」 편).

원회'를 설치하고(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히로시마지부 편」), 한·일 양국 정부가 회담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를 다루어달라고 호소한다. 한일협정을 기해서는 일본에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재한피폭자실태조사단'을 파견했다. 민단 히로시마지부 피폭자조사단은 1965년 5월 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방한하여, 합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만나고 보건사회부, 원자력원, 대한적십자사도 방문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계기로 적십자사를 통해 이 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 등록을 실시했고, 처음으로 600여 명의 원폭피해자 등록을 접수받았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히로시마지부 편」).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서 당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호소나 합천의 모임 등도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상당수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조차 “원폭피해자인 것을 그때는 몰랐다”¹⁴⁾고 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언제나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전국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나 결사체 형성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원회' 방한은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일본 시민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됐다. 이들

14) 엄분연 씨와의 인터뷰(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엄분연」 편).

의 방한 소식은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한국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신생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한국 원폭피해자 연구의 언론 발표와 방한한 민단 인사와 히라오카 다카시의 만남도 이 시기에 진행됐다.¹⁵⁾ ‘히로시마·나가사키 증언회’의 가마다 사다오(鎌田定夫) 교수는 민단의 방한에 대해 “1965년 6월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을 전후해 일본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부상하고 마침 베트남 전쟁이 개시되어 일본 내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에 민단의 한국 피폭자 실태조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처음으로 외국인 피폭자 특히 한국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広島・長崎の証言の会・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1986).

민단 히로시마본부 재한피폭자실태조사단의 방문이 단순히 조직적

15) 히라오카 전 히로시마시장의 개인적 회고에서 자신의 첫 한국방문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나온다.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안치열 소장은 그들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를 말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1963년 8월 6일에 연구소 연구원 중의 한 명이 “오늘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다. 한국에도 당연히 피폭자가 있지 않을까”하며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화제가 되어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로 조사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보건소와 독립병원을 통해 한국 내에 있는 피폭자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이를 통해 처음으로 203명이 등록을 했다”(平岡敬 1988, 15).

운동 차원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민단 조사단 방한은 히로시마 재일 한국인¹⁶⁾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의 작동이기도 했다.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이루어진 민단의 ‘본국가족초청사업’은 한국 원폭 피해자와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당시 본국가족초청사업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출신의 원폭피해자가 포함됐다. 그중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던 박모 씨가 민단과 일본 주재 친척의 도움으로 후생성에 피폭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받은 사연이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¹⁷⁾

이처럼 히로시마거주 재일한국인 커뮤니티는 원폭협회 결성 이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양국 시민사회의 연결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식민지 시기 히로시마로 이주하기 전 고향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라는 지역적 연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친인척 연결망과 지역

16) 여기에서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민단 계열의 조선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한·일 간 시민 교류의 이념적 통제는 3절에서 더 다루겠지만, 이들의 활동은 양동숙(2018)의 연구에서 주로 조명되고 있는 ‘재일 조선인’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7) 물론 이후 엄분연, 김일선, 손귀달, 손진두 씨의 피폭자 건강 수첩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와 같은 행정관료제적 절차는 급격히 정치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적 연고에 기반을 둔 교류가 일본의 시민 활동가나 단체들의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연결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교류는 그 정치적 색깔이 더 열린 측면이 있다. 송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 서신을 통한 일상적 정보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체재 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 등은 특히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친인척 연결망에 기반을 둔 연결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교류에 따르는 언어적 장벽이 일본 시민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보다는 이들이 일본 시민사회 진영과 한국 원폭피해자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일본 사회에서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던 1965년을 즈음한 기간 동안 양국 시민사회 간의 연대의 기초는 시민사회 운동 진영 인사들과의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간 연결망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토대는 식민지 시기의 이주와 귀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특히) 귀환 이후 밀항을 통한 재(일본) 입국 과정 등을 겪으면서 형성되었다.¹⁸⁾ 이러한 사실은 해방 후 일본에 남았던 조선인들과 모국으로 돌아간 일본 귀환자들, 그리고 한

18) 해방 후 히로시마 조선인의 귀환과 밀항 등에 대해서는 오은정(2018a) 참고.

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 그리고 밀항으로 다시 현해탄을 건넌 이들, 제국 일본 시절 조선에서 살았다가 본국 송환된 일본의 귀환자들은 그 영토 안에서 그리고 그 영토를 넘어서는 열린 네트워크의 연대(현 무암 2006)를 구축해나간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3. 한·일 시민연대에 허용된 정치적 목소리

1967년 원폭협회 설립은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론장으로 분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회담을 즈음한 한·일 시민사회 간 교류 등과 맞물려 ‘재한피폭자’ 문제로서 일본 시민사회에서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원폭협회가 1989년에 발간한 『연혁』에 따르면 한국 원폭피해자의 현실을 알리는 보도들이 일본에 간헐적으로 보도되면서 ‘속죄’와 ‘위로’의 뜻을 가지고 협회를 방문한 인사들과 이들이 전달하고 간 위로금과 인도적 구호금, 의료지원 등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원폭협회의 임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들의 실정을 호소하고,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기록들도 남아 있다. 초창기 원폭협회의 주요 활동은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 정부 관계자나 언론사를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구호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에서 교류를 원하는 단체와 상호 방문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었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주목할 만한 점은 원폭협회 설립 이후 약 20여 년간 이 같은 대외 교류와 구호 활동, 한·일 시민연대는 주로 인도적 구호나 위로 그리고 의료지원 차원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귀환 이후 줄곧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던 많은 원폭피해자들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구호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혜택이 이들의 활동과 연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활동의 방식이 구호금이나 인도적 지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으로서, 구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의 운동 단체와 활발하게 연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원폭협회와 교류에 나선 일본의 단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매우 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폭협회와 교류해온 일본의 ‘핵금회’는 1961년 11월 15일에 학자, 문화인, 정당, 정치가, 노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단체로, 공산당이나 사회당 계열의 반핵단체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원폭협회에 기부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단체로는 제일 한국인 단체나 종교 계열 단체들을 비롯해 우익 계열의 단체들도 적지 않았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혹여 이들 중 정치적 색채를 띠는 단체들과 교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따랐다.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으로 일본의 좌파 운동 진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계심이 극에 달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특히 이러한 분위

기가 강했고,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도일(渡日)도 엄격히 제한받았다.

안보 위기와 반공 담론이 지배한 냉전시기 한국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그 이후로도 줄곧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사회단체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받았다. 또한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시민사회와의 교류에 정치사상적 제약은 도일이라는 실질적인 월경(越境) 행위에 가해지는 행정관료제적 제약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신원조회를 통해 월경을 제한하고 소양 교육을 통해 다시 행동의 반경을 제약했다. 해외 출국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제약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일반적이긴 했지만, 그것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 심했다. 분단 체제 하의 남북한 양쪽의 정권이 유지해온 억압적 체제는 재일 한인 사회로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교류하는 일본의 지식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 들의 실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요나가 게이자부로(豊永惠三郎)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장은 “1971년 방한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1974년에 원폭협회 회장이던 신영수 씨의 피폭자 건강 수첩 취득을 위해 증인을 찾아주는 활동 등을 하게 됐다. 당시에 원폭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본 방문이 비자 발급부터 까다로운 시기였지만, 특히나 신회장은 우리 일본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었다. 가령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공산당이나 혹은 좌익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닌지를 감시당한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를 정보당국에 항상 보고해야 했다. 우리도 행동에 조심했다. 되도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들과의 접촉은 조심하고, 조총련 계열의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 당국도 우리의 행동을 경계하던 때였다”라고 이 시기를 회고하기도 했다.¹⁹⁾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 1975년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회가 결성되었지만,²⁰⁾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는 이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과 공식적인 교류는 하지 않았다. 자칫 일본을 방문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사상 검증이라는 피해를 입히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히라오카 씨도 당시를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적이고 좋지 않았던 때였다. 기독교 관련 단체에 일본인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온하게 여겨졌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 사람은 공산주의에 물든 이들이라는 색깔이 덧칠됐고,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 진영에서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에 반감이 있었다. 손진두 씨가 일본으로 밀항해, 밀입국과 불법체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왜 외국인 범죄자에게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을 해야 하느냐’라는 반감도 있었다”고 회고했다(平岡敬 1988).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그 중에서도 정부의

19) 연구자와의 인터뷰(2007/07/26 및 2012/08/05).

20)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에 대해서는 양동숙(2018) 참고.

감시가 직접적이었던 원폭협회의 활동은 국내의 정치 세력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70년대 중반부터 반전반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원폭협회와 함께 원폭피해자 운동을 해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1974년 2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미국교회여성연합회’의 한국 방문과 일본 평화회의 참석을 계기로 평화운동의 한 일환으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 뛰어든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이전까지의 운동과도 맞물려 있었다.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참여했던 ‘일본평화회의’에서는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가 이미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제일 교포 인권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던 중에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찾고 있었던 때였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4).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은 주로 원폭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활동이었다. 1974년 가을 원폭협회의 의뢰와 협력으로 첫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1977년 일본에서 열리는 반전반핵평화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기 위해 두 번째 조사가 이뤄졌으며, 1979년 ‘미국장로교여성선교회’ 후원으로 세 번째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홍보할 예정이었고, 뒤의 두 차례 조사는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로 약칭)에 의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는 10·26과 광주민주화항쟁 등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조사를 맡았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탄압으로 자료를 압수당하는 등 출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4).

1970년대 후반 ‘시민회’의 회원이었으며 현재는 ‘시민회’ 회장인 이치바 준코 씨는 당시를 “혹시나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와 감시를 할까 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건물을 들어갈 때조차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들어가서는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소곤소곤 말하던 때”라고 회고했다.²¹⁾ 그녀 또한 일본에서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혹여나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누가 될까 조심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았던 8월 6일 원폭협회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제가 열렸다. 매년 꾸준히 행사에 참석해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치바 준코 ‘시민회’ 회장은 이날 위령제에서 “처음으로 그 분들이 6·25전쟁 당시 피난하던 이야기”를 들었다.²²⁾ 그녀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이 언제나 원폭이 떨어지던 날 혹은 귀국 이후의 어려움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훨씬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졌다고 기억했다.²³⁾

21) 연구자와의 인터뷰(2012/08/05).

22) 연구자와의 인터뷰(2012/08/05).

23) 그러나 여전히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감시 속에 있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유학하며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일본에서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자신의 우편물이 감시당하거나, 서울에서 머무르던 집에 정보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곤 했던 사

요컨대 이처럼 개별적 차원에서의 자기 검열과 정부의 직접적 감시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반핵·반전과 같은 정치적 목소리보다는 피해자 구호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졌다. 한국 사회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은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의 상징이기도 했고, 원폭을 투하한 당사자로서 미국을 가해의 주체로 명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창립 당시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 측의 원자탄 투하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원폭병의 치료 가능성 연구, 피폭자에 대한 치료 알선,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생존자에 대한 원호를 행한다”라는 강령을 채택할 때만 해도 미국과 연합군 측은 이들의 활동에 중요한 상대로서 거론됐지만, 1970년대를 지나며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는 단체의 공식적 활동 자료에는 남아 있지 않다. 냉전시기 미국이 주도한 전후 동아시아 지배체제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통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남긴 참상이 미국에게는 영광이자 감추어야 할 수치라는 점에서) 원폭에 대해 거론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은 무의식적 장치”(정근식 2005, 15)로 기능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반대나 미국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시민회’ 회원과의 인터뷰 2012/08/05).

4. 피폭자 건강 수첩 소송과 한·일연대의 새로운 장

본 장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 간 연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축이 된 피폭자 건강 수첩(이하 '수첩'으로 약칭) 교부 소송이 이들의 역사에서 갖는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1968년 손귀달의 일본으로의 밀항과 귀환조치 이후 결성된 '한국피폭자구원한일협의회'는 그해 12월 원폭협회 부산 지부장 엄분연 씨와 회원 임복순 씨를 교토의 제2차세계대전한국인전몰자위령제에 초청했다.²⁴⁾ 두 사람은 위령제 참석 후 히로시마원폭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여자정신대원으로 작업 중에 피폭 당했다. 일본인으로서 피폭된 우리에게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수첩²⁵⁾을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일본에 가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호소하며 히로시마시에 수첩 교부를 신청한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이전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박모 씨에게 수첩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동아전쟁에 사역했던 반도·일본인”들은 제국 일본의 과거 전쟁 수행의 책임을 소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었고, 수첩 교부가 한·일 간 역사

24) 이 두 사람은 본고의 서장에 소개한 두 사람들이다.

25) 수첩은 일본 정부가 원폭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며 발부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수첩'으로 불리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 치료 등의 의료보조를 받을 수 있다.

문제로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엄분연과 임복순의 수첩 교부 신청을 계기로, 협회의 국가 간 보상 차원의 운동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시작됐다. 손진두 씨의 후쿠오카 밀입국과 수첩 재판이 대표적이다.²⁶⁾ 이 사건과 소송은 한국으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이 독일 치료를 위해, 그리고 수첩을 받기 위해 다시 현해탄을 건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원폭 피해자와 일본 시민단체 간의 정치적 연대가 강화되는 기점이 되었다. 머리말에서 소개한 초창기 한국원폭협회 부산지부의 여성 회원들의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에 대한 요망서 전달과 반전 영상 작업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자 수첩 교부 문제는 일본 사회에서는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4년 3월 손진두 씨의 수첩 재판 1심에서 승소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1974년 7월 22일 일본 후생성은 후생성 공중위생국장 통달(위발 제402호, '402호 통달'로 약칭)을 발한다. 후생성은 이 '402호 통달'을 통해 "원폭특별조치법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의 영역을 넘어 거주지를 옮긴 자에게는 동법의 적용은 없다"라는 행정 방침을 정한다. 그리고 피폭자가 되기 위한 "수

26) 『쥬코쿠신문』 홈페이지 인물 인터뷰 기사 참조(前広島市長 平岡敬さん(1927年~)
(9) 在韓被爆者取材-日本人の責任見つめる(2009年10月14日)(<http://www.chugoku-np.co.jp/kikaku/ikite/>).

첩 교부 조건을 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일본에 체재할 것”을 명기했다. 일본에 거주 관계를 갖는 자들만이 피폭자로서의 자격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제약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거나 입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체재할 곳이 없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경우 수첩의 교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우선 물리적으로 일본의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이 가능하지 않은 자는 수첩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또한 도일한 뒤 수첩을 취득해 피폭자 자격을 얻더라도 귀국과 동시에 일본을 떠나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관료제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수첩을 받는 경우는 첫째, 운동적 차원에서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첩 신청을 하는 경우, 둘째, 아주 특별한 기회가 닿은 경우나 제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일 치료 제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선발된 경우 그리고 셋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본의 친인척과의 연줄망이나 직업적 측면에서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수첩을 내는 데 수반되는 거래비용 혹은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한정됐다.

수첩의 의미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 원폭피해자 개인들에게도 그리고 한·일 간 시민연대의 틀에서 크게 변화했다. 우선 개별적 차원에서는 1991년 일본의 ‘한국 원폭피해자 의료지원기금 40억 엔’ 지원 결정 이후 원폭협회 회원가입 자격이 수첩 소지자로 한정되면서, 누구나 원폭협회에 가입해 피폭자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약

간의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발급한 수첩이 필요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취득은 크게 늘어났다(오은정 2014; 2013). 한·일 간 시민연대의 측면에서는 이 지원금이 피해자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 피폭자 복지기금의 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언젠가는 의료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맞물리며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로운 구호와 운동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수첩 소송'들이 보상적 성격과 구호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사실 수첩 소송은 한국 국내법 제정을 통한 원폭피해자 보상을 요구한 원폭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보는 협회의 입장은 1980년대 후반 원폭협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진행한 23억 달러 보상청구 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87년 11월, 전후 미처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원폭협회는 도일 치료 중단 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그 보상책임을 묻는 23억 달러 보상청구를 제기하게 된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당시 이 보상청구운동은 일본변호사협회 및 '시민회의', '시민회'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에서 고양된 일제피해자 보상 여론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여타 대일보상청구 운동과 때를 같이해 미디어에서도 원폭피해자 관련 소식이 연일 오

르내렸고, 협회는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그 방문의 결과가 나온 시기는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보도됐다. 한국 원폭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대사회적으로 가장 격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시기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원폭협회의 보상요구는 한·일 양국 정부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피폭자에게 대외 원조의 형식으로 변질됐고, 한국 원폭피해자 원조를 위한 지원금의 액수 또한 원폭협회가 요구한 금액의 1% 정도에 그쳤다.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거출명목으로 계상된 이 돈은 원조라는 성격상 한국의 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에 송금되었고, 그 운용은 협회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원폭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크게 낙담하고, 이에 반발해 40억 엔 수령 거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각종 수첩 재판들은 원폭협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주류적 운동 방식이었다기보다는 23억불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교부로 왜곡되기 시작한 원폭협회의 내부 갈등에서 약간 빗겨나 있었던 일본 ‘시민회’,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원자들과 변호인들이 한국의 개별 원폭피해자들과 접촉해 만들어낸 것에 가까웠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보상운동 방식이 아니라 수첩 발급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

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원폭협회 설립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 등의 운용에 있어 갈등이 있어 오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40억 엔이 거출된 이후에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회원들의 고령화 등으로 보상 투쟁 운동의 동력을 상실한 원폭협회의 내부적 요인들도 작용하였다. 원폭협회 차원의 보상 요구 운동은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정부의 임시방편 속에서 회피되는 가운데 40억 엔 거출금이 지급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결과들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방사능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한 피폭자라는 경계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²⁷⁾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402호 통달’ 조치가 일본의 영역 바깥의 원폭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가운데 1998년 처음 시작된 광귀훈 소송과 이강령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온 2000년대 초반은 일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피폭자라는 범주에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상시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2002년 12월 오사카지 방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는 건강수당 지급을 중단하게 하는 후생성 ‘402호 통달’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의 영역에 거주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27) 일본의 원폭피폭자원호정책에서 ‘피폭자’라는 범주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관해서는 오은정(2018b) 참고.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또한 이후 ‘소송을 통한 운동’이라고 할 만큼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시발점이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곽귀훈 소송의 결과 2003년부터는 일본의 영역 바깥에서도 수첩 취득자, 즉 한국의 원폭피해자들 중 수첩을 소지한 자는 ‘피폭자’로서 피폭자 건강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은 여전히 이 수첩의 신청과 교부는 일본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신청한 수첩 교부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에 갈 수 없는 고령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수첩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는 2008년 11월 ‘정남수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이후 한국에서의 수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했다. 또한 2007년 11월 1일 ‘402호 통달’의 위법성도 최종 확정됐다. 1995년과 1996년 ‘한국 원폭피해자 미쓰비시 징용자 동지회’에 소속된 회원 46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강제노동·피폭의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에서였다. 2005년 1심 패소에 항소한 이들에 대해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402호 통달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일본정부로 하여금 1인당 12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2007년 최고재판소는 이를 확정 판결했다. 이 재판은 이후 ‘402호 통달’로 인해 피폭자건강관리 수당 등의 지급 등에 피해를 받은 모든 재외국민 피폭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판결로 이어졌다. 또한 일본 사법부는 ‘402호 통달’과 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과거에 미지급된 피폭자건강관리수당의 지급도

명령했다(오은정 2013).

5. 결론

한국의 정치사회적 공론장에서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식민 지배의 민족주의적 피해를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본제국의 간악한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신의 징벌”에 희생된 번제(燔祭)와도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중앙일보 2013/05/20).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귀환한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 그리고 일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에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도 중요한 연대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패전 후 일본에 남았던 조선인들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 귀환자들, 한국으로 돌아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주자들, 그리고 밀항으로 다시 현해탄을 건넌 이들이 그 영토 안에서 그리고 그 영토를 넘어서 연대를 구축해나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연대가 한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폭협회를 중심으로 보상청구운

동과 특별법 제정운동이 한국 사회와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 그리고 일본 정부의 회피와 임시방편 속에 표류했다면, 수첩 받기로 대별되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천과 운동은 손진두 소송을 필두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위 수첩 재판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효과를 내면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양되기 시작한 한국의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와 관련된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의 내외 차별을 문제 삼으며 이를 한국 원폭피해자 구호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수첩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한·일 시민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의 지점이었다. 그 이전까지 한·일 연대는 주로 구호와 치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 활동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활동에도 끊임없는 제약과 감시를 행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가 규율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래 냉전시기 한국의 안보 담론과 정치사회적 제약은 원폭피해자들의 개별적 차원에서는 자기 검열로, 원폭협회의 조직적 차원에서는 정보 당국의 직접적 감시로 이어졌다. 원폭협회의 활동이 또한 구호금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져 나간다. 그러나 구호금이나 위로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는 원폭협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는 명암을 뚜렷하게 남겼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원폭피해자운동의 고립 및 정치사회적 보수화로 이어지는 결과와도 연결된다.

한편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원고가 된 일련의 수첩 재판들의 결과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언설이 내포하는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피해보상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노력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되어가던 1960년대는 일본에서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피폭자’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공적인 역사 담론에서 과거 피식민자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소거(消去)되던 시기였다. 그랬기에 일본의 시민단체의 인사들에게 ‘제국의 신민’이었던 이들을 ‘재한피폭자’로 다시 마주했을 때, 피폭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식민과 방치라는 삼중의 피해(이치바 준코 2013)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연대의 손길을 건넨 이들의 활동은 국가적 구도로는 과거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관계였지만, 피폭을 매개로 한 이들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성’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과 가난, 정치적 격동과 억압 아래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던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5. 『원폭피해자 고크훈 소송기록 1·2·3』. 대일과거청산소송 자료집.
- 권혁태. 2009.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서울대 일본연구소). 1호. 60-89.
- 김승은. 2012a. “재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 (1965-1980).” 『아세아연구』. 제55권 2호. 104-135.
- _____. 2012b. “한일 과거청산과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운동의 역사적 의미.”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09-126.
- 김원. 2017.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 손진두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2. 245-304.
- 김재근. 1968. “한국원폭피해자의 현실.” 『신동아』. 3월호. 179-187.
- 김정경. 1993.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다가기 겐이치. 1995. 『전후보상의 논리』. 한울.
- 대일항쟁기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 동 위원회 보고서.
- 대일항쟁기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08. 『내 몸에 새겨진 8월』. 동 위원회 보고서.
- 박경섭. 2009. “조선인원폭피해자와 초국적 시민(권).”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3권. 153-166.
- 박수복. 1986. 『핵의 아이들』.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 _____. 1975.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한국원폭피해자 30년의 역사』. 창원사.
- 백옥숙. 2004. “한국원폭피해자의 특성과 지원 현황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 백충현. 1987. “재한원폭피해자의 현황과 법적 구제 문제.” 『대한변호사협회지』. 2월호.
- 손종민. 2006. 『한국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 보장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자코, 유카. 2001. “일본의 전시 동원 관련 재판의 진전과 현황.” 『중한인문학연구』. 6권. 309-333.
- 양동숙. 2018.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기억과 전망』. 38. 206-254.
- 오은정. 2018a.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제51권 2호. 169-219.
- _____. 2018b. ““전쟁민(戰災民)”에서 “피폭자(被爆者)”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일본비평』. 제19호. 308-341.
- _____. 2014. 「관료제적 문서주의 속에서 기록과 기억: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피폭자건강수첩 취득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47권 2호. 159-200.
- _____. 2013.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구성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우즈미, 아이코. 2010. 『전후보상으로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 김경남 역. 논형.
- 이상화. 1995. “재한원폭피해자의 생활과 남아 있는 보상문제.” 『한국현대사연구회 근현대사강좌』. 7권. 192-210.

- 이지영. 2017. “한·일 원폭피해자의 고통의 감정 연대와 균열.” 『한국민족문화』, 62, 45-74.
- _____. 2012. “한인원폭피해자문제 관련 연구와 자료현황.” 『일본공간』, 12호, 229-246.
- 이치바, 준코.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이계수 역. 역사비평사.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민단50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편집위원회 편. 서울신문사.
- 정근식 편. 2005.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 조향미. 2011. “평화운동과 원폭피해자 문제.” 『한일교육연구』, 17호, 56-75.
- 진주. 2004.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이수. 2003. “일제강점기 인적 수탈에 대한 피해보상소송과 그 법적 검토: 민사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147-172.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9. 『그날 이후—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록』.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 _____. 1984.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 _____. 1975.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
- _____. 1989. 『연혁·현황실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편.
- 허광무. 2011. “전시기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과 원폭피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지역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5-55.
- _____. 2004.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93-122.
- 현무암. 2006. “동아시아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창작과 비평』, 131호, 269-273.

足立修一. 2012. “前 미쓰비시 징용 노동자 재판의 일본에서의 성과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의 역사적 의의와 남겨진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인 원폭피해자 소송 자료 기증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37-60.

Naono, Akiko. 2010. “Transmission of Trauma, Identification and Haunting: A Ghost Story of Hiroshima,” *Intersections: Gender and Sexuality in Asia and the Pacific*, 24(<http://intersections.anu.edu.au/issue24/naono.htm>)

_____. 2005. “Hiroshima as a contested memorial site: analysis of the making of the peace museum,” *Hiroshim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1, 229-244.

_____. 2003. “Searching for grandpa in the Hiroshima memoryscape, under the shadow of the bomb,” *Inter-Asia Cultural Studies*, 4(3), 479-491.

Oh, Eunjeong. 2017. “Nationalism and Reflexive Cosmopolitanism in Korean A-Bomb Victims’ War Memory and Transnational Solidarity.” *Development and Society*, 46(2), 303-316.

Palmer, David. 2013. “Japanese and Korean/Chinese Reconciliation through Experience-based Cultural Interaction,”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1), 17-38.

Yoneyama, Lisa. 1999. *Hiroshima Traces: Time, Space, and the Dialectics of Mem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伊東壯. 1988. “原子爆弾被害者援護法’制定要求と在韓被爆者問題.” 『在韓被爆者を考える』. 在韓被爆者問題市民會議編. 凱風社. 27-41.

- 中島竜美, 1988, “朝鮮人被爆’の歴史的意味と日本の戦後責任.” 『在韓被爆者を考える』, 在韓被爆者問題市民会議編, 凱風社, 42-58.
- 根本雅也, 2006, “広島戦後三〇年間にみる原爆被害の表象と実践.” 一橋大学社会学研究課修士論文.
- 朴秀靑・郭貴勳・辛泳洙, 1975, 『被爆韓國人』, 朝日新聞社.
- 平岡敬, 1988, “在韓被爆者の戦後史.” 『在韓被爆者を考える』, 在韓被爆者問題市民会議編, 凱風社, 10-26.
- 広島県被爆者団体協議会, 2001, 『核兵器のない明日願って: 広島被団協の歩み』, 広島県被爆者団体協議会編
- 広島・長崎の証言の会・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1986, 『イルボンサラムへ:40年目の韓国被爆者』, 広島・長崎の証言の会・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編.

Abstract

From an Imperial Subject to a Zaikan Hibakusha

Sociocultural foundation of Korea-Japan civil solidarity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and its change

Oh, Eunjeong

Hallym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formation of the Korea-Japan civil solidarity, its socio-cultural found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s. The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First, I shed light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movement in the 1950s and 1960s and the early stages of the civil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I paid attention to main figures of Japanese civic group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the microscopic dimension of their experience and reflection, and their discourse. Second, under the Korean government's security discourse and anti-Communitistic surveillance, political and social restrictions o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s aggravated, and their activities was constrained in the 1970s and 1980s. Finally, I looked at so called the Techo-trial, which has been a major achievement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since the 1990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Japan civil solidarity

■ **Keyword:**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Korea-Japan Civil Solidarity, Anti-Communitistic Surveillance, Techo-Trial, Hibakusha

투고: 2018/09/26 심사: 2018/10/15 확정: 2018/10/30